



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소고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국, 서해안 지역 자원부존 가능성에 주목

2001년 여름에 방문한 평양의 밤은 많이 어두웠다. 거리에는 고층 아파트가 즐비했지만 저녁에 불을 밝힌 가구는 아파트 한동을 통털어 많아야 10세대 남짓이었다. 북측 안내원에게 “저 아파트에는 사람이 살지 않느냐. 초저녁인데 불이 꺼져 있다”고 순진함(?)을 가장해 질문을 해봤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던 안내원은 “전력을 아끼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전을 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로 비춰지기 보다는 전력이 모자라다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은 나아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해가 뜬 무렵에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해 해가 질 무렵이면 저녁식사까지 다 끝내는 등 최대한 전기를 아껴 생활하고 있다. 남측 인사들이 주로 머무는 평양 창광거리의 각종 상점과 음식점 등을 갖춰 ‘평양의 명동거리’로 불리지만 저녁무렵 켜진 네온사인도 밤 9시무렵이면 대부분 꺼지곤 했다.

현재 북한은 전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소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석유류도 부족한 형편이다. 미국과 북한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미국이 지원하던 중유 공급도 끊기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북 경수로

“북한에는 서해의 서한만 분지와 안주 분지, 동해의 동한만 분지 등 대륙붕의 3개 분지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서한만 분지에서는 1985년에 소량이기는 하지만 하루 450배럴의 원유가 시험생산되기도 해 석유 매장이 가능한 퇴적분지의 존재를 시사한 바 있다.”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도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근 완전 종료를 선언했다.

그나마 중국이 꾸준히 석유류를 지원하고 있어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조·중동맹의 공고화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꾸준히 북한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해 앞바다에서 원유 시추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초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과 중국이 해저유전을 공동개발키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서해지역을 유력한 곳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적 수역인 발해만 앞바다에서 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중질유 성분이 많은 원유를 캐고 있는데 같은 대륙붕인 서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원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계는 자원확보를 위한 “충성없는 전쟁중”

자원확보를 위한 중국의 행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 석유 소비의 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1996년 ‘국외 석유, 천연가스 탐사 개발에 적극 진출’ 한다는 방침을 세운 이후 세계 30여개 국에서 원유탐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수단은 물론 앙골라와 이란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과는 동지나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대립을 빚으면서까지 자원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올들어 모로코 나이지리아 케냐를 돌며 대규모 유전개발 계획을 잇따라 성사시켰고 이보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2억달러 규모의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원외교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뿐만이 아니다.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도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환경론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면서도 미국은 103억배럴 가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북동쪽 유전 개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법안이 상정됐지만 격론끝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알래스카 유전 개발건은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겨냥해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내세우는 등 자원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등 자원확보에 나섰다. 일본은 최근 수입 원유의

15% 수준인 자주개발 원유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 올린다는 '원유 자주개발 정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은 1960년대 이후 자주개발 비율을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추진하다가 원유값이 안정되자 2000년 이 정책을 포기했지만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책 변경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독일도 유럽연합(EU)에 대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던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세계 석유 공급량은 2004년부터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석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각국의 이같은 자원확보 노력은 가히 '충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를만하다.

반면 자원부국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 "외국 회사의 약탈은 끝났다"며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국영 에너지기업인 YPF에 넘기거나 6개월내에 떠나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도 지난 3월 자원 국유화를 선언하며 외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32개 유전개발사업의 지분 60%를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에 넘기도록 했다. 끝까지 버틴 프랑스 업체 토탈과 이탈리아 애니는 결국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럽이 소비하는 가스의 25% 이상을 공급하는 러시아는 영국 가스업체 인수를 영국 정부가 방해하자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중남미에서 자원민족주의가 도미노처럼 번지면 아프리카 등 다른 자원부국들도 자원 무기화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의 자원확보 노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이 해외 유전개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석유와 가스는 전체 수입물량의 4.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와 해외자원 개발 환경이 비슷한 스페인 독일 일본에 비해 한참 뒤지는 수준이다.

이제는 북한지역에 눈 돌려야 할 때

정부는 2008년까지 자주개발율을 8%로 높이고 2013년까지 18%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원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며 자원외교에 본격 나섰다 이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국가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자원외교를 펼쳐왔다. 5월에도 노 대

**“남북간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또한 자원을 갖고 있는 북한과 시추능력을 갖고 있는 남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북한이 기술이나 자본 부족으로 석유개발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마당’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원유를 퍼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민족적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통령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레이트 등 자원부국을 찾아 다니며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냈다.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과 자원협력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거나 대한석유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산유국 주요 인사 초청 행사를 갖기로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는 것도 긍정적이다.

자원확보를 위해 이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북한지역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북한에는 서해의 서한만 분지와 안주 분지, 동해의 동한만 분지 등 대륙붕의 3개 분지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서한만 분지에서는 1985년에 소량이기는 하지만 하루 450배럴의 원유가 시험 생산되기도 해 석유 매장이 가능한 퇴적분지의 존재를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이 원유를 캐고 있는 발해만과 같은 대륙붕으로 이어진 서해상에서 석유를 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북한에는 한때 싱가포르 소버린벤처나 아일랜드의 애니맥스 Plc, 호주의 자원개발 업체 등이 탐사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개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만큼 남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 지역에서 원유개발은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남북간 교류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또한 자원을 갖고 있는 북한과 시추능력을 갖고 있는 남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언젠가 대북 에너지 지원을 해야할 상황이라면 북측 지역에 매장된 원유를 남측이 캐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기술이나 자본 부족으로 석유개발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마당’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원유를 퍼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민족적 자존심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화되었다.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북한 명지총회사는 최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서 분단 이후 61년 만에 첫 광물자원 합작사업인 정촌흑연광산 준공식을 가졌다. 이곳에서는 연간 3000t의 흑연이 생산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1830t을 남측에 15년간 갖고 올 계획이다. 국내 수요의 20%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규모는 작지만 남북간의 첫 자원 합작 개발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총 투자액 1020만달러는 남과 북이 각각 50 대 50으로 현물 투자했으며 광진공이 채광 운반 및 선광시설을, 명지총회사가 부지 토목시설 전력 및 용수시설 등을 맡았다.

석유 가스 부문에서도 남북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원유 채굴과 에너지 지원 등에서 남과 북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